

투자자가 갖는 것은 대출채권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돈을 빌려주는 투자의 권리 구조와 회사가 문을 닫을 때의 절차를 법령과 감독기관 발표로 살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20년 8월 27일 시행됐다. 시행 직전인 6월 3일 이 영업을 하던 업체는 241개였다. 누적 대출액은 10조 3,251억원이다. 등록제로 바뀐 뒤 2022년 5월 11일까지 등록을 마친 곳은 누적 47개사다.

이 투자에서 돈을 낸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의 채권자가 아니다. 대출채권은 회사가 갖는다. 투자자가 갖는 것은 원리금수취권이다. 회사가 받아 낸 돈을 투자 금액에 비례해 나눠 받는 권리다. 회수가 안 되면 그만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떼이고,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 돈은 어디에 남는가.

연구소는 이 시장에서 규칙이 늘 뒤에 왔다고 본다.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LTV) 규제는 2026년 4월 2일에야 이 업권에 걸렸다. 그 근거도 법령이 아니라 행정지도다. 주식을 담보로 잡는 대출은 2026년 7월 16일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조였다. 그 잔액은 2025년말 5,237억원에서 2026년 6월말 8,983억원이 됐다.

발행일	자료 기준일	분량
2026년 8월 31일	2026년 8월 30일	본문 19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니다. 투자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온라인으로 돈을 빌려주는 투자에 넣은 돈은 무엇으로 남고, 떼이면 누가 지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투자자가 갖는 것은 대출채권이 아니라 원리금수취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상품을 차입자가 갚지 못하면 손실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고위험 상품으로 적었다. 감독규정은 연체율이 10%를 넘으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새로 투자하지 못하게 했다. 15%를 넘으면 공시를, 20%를 넘으면 위험 관리 방안 보고를 시킨다. 규칙은 시장이 커진 뒤에 왔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돈을 넣기 전에 그 회사가 등록 업체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한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내건 광고는 법이 금지한 광고다. 한 사람이 넣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고, 한 차입자에게 넣을 수 있는 금액에도 따로 한도가 있다. 이자에서 14%를 떼고 받는다.

한눈에

투자자는 대출채권을 갖지 않는다. 회사가 회수한 돈을 비율대로 나눠 받는 권리만 갖는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업체 수와 잔액은 발표 주체와 시점에 따라 다르다. 값마다 시점을 적었다.
- **이용자는 투자자와 돈을 빌린 사람을 합친 말이다.** 투자자만 따로 센 값은 확인하지 못했다.
- 업권 전체 연체율은 2023년말 값까지 확인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전한 보도에 따른다.
-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만 원래 이름을 붙였다. 부록 가에 목록이 있다.

차례

1장	돈을 넣으면 무엇을 갖게 되나	3
2장	업체는 5분의 1이 되고 돈은 다시 늘었다	5
3장	규칙은 시장이 커진 뒤에 왔다	8

4장	얼마나 떼이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	11
5장	아직 막히지 않은 곳	13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15
부록 가	용어 풀이	17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17

1장

돈을 넣으면 무엇을 갖게 되나

이 투자는 무엇이고, 법은 어떤 구조로 짜 두었는가.

2020.8.2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 날 금융위원회 2020년 8월 26일 발표	5·10·30 억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세 단계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2020년 1월 28일	7% 한 차입자에게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와 70억원 가운데 작은 값이다 금융위원회 2020년 6월 4일 발표
---	---	--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사이에 회사가 있다

법은 이 거래를 세 토막으로 나눠 정의한다. 투자자가 온라인 화면에서 특정 차입자에게 돈을 대는 것이 연계투자다. 회사가 그 돈을 지정된 차입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연계대출이고, 어음할인과 양도담보도 들어간다. 회사는 그 대출의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준다.¹

법은 회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정한다.¹

투자자가 갖는 것은 대출채권이 아니라 원리금수취권이다. 회사가 회수한 돈을 비율대로 나눠 받는 권리다.

연계투자와 연계대출

투자자가 특정 차입자에게 돈을 대려고 내는 돈이 연계투자다. 회사가 그 돈을 차입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연계대출이다.

<표 1> 같은 거래를 법은 세 이름으로 나눠 부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정한 용어와 그 뜻 (2026년 8월 기준)

법이 쓰는 말	누가 무엇을 하나	그래서 누가 무엇을 갖나
연계투자	투자자가 특정 차입자에게 돈을 대려고 돈을 낸다	낸 돈만큼의 몫
연계대출	회사가 그 돈을 차입자에게 빌려준다	대출채권은 회사 몫
원리금수취권	회사가 회수한 상환금을 투자 금액에 비례해 나눈다	투자자는 나눠 받을 권리만

주: 법이 정한 정의를 짧게 옮겨 적었다.¹

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국문 원문을 정리.

등록하지 않으면 이 영업을 할 수 없다

등록 없이 이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다.² 자기자본도 있어야 한다. 직전년도말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5억원, 10억원, 30억원 세 단계다.³ 임원 자격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령의 결격 사유를 쓴다. 등록된 내용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¹

투자한 돈은 회사 돈과 섞이지 않는다

회사는 투자금과 상환금을 따로 맡겨야 한다. 맡길 곳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자산 1조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이다.² 한 차입자에게 내줄 수 있는 대출은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와 70억원 가운데 작은 값까지다.⁴ 대출을 내주는 금융기관이 이 투자에 들어올 때도 한도가 있다. 한 상품의 연계대출 모집 금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상품은 20%, 나머지 상품은 40%까지다.³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돈을 넣기 전에 그 회사가 등록 업체인지 조회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회사 정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2 계약 화면에서 내가 받는 것이 대출채권인지 원리금수취권인지 읽는다.

확인하는 곳 · 각 회사 연계투자 약관의 투자 위험 항목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등록 업체가 아닌 곳이 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다. 상품 조건을 따져 볼 이유가 없다.

2장

업체는 5분의 1이 되고 돈은 다시 늘었다

시장은 얼마나 되고, 돈은 어디로 옮겨 갔는가.

241개

법 시행 직전 이 영업을 하던 업체 수

2020년 6월 3일 · 금융위원회

47개사

등록을 마친 업체 수. 누적이다

2022년 5월 11일 · 금융위원회

10조 3,251억원

법이 생기기 직전까지의 누적 대출액

2020년 6월 3일 · 금융위원회

법이 생기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영업을 하던 업체는 2017년말 183개에서 2020년 6월 3일 241개가 됐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은 6.1배, 연체율은 5.5%에서 16.6%로 세 배가 됐다.^{5,6,7} 다만 이 잔액과 연체율은 241개 전부가 아니라 통계업체 공시에 잡힌 141개사만 센 값이다.⁵

2020년 6월 대출 잔액 2조

3,292억원, 2026년 6월 2조

3,027억원. 시장 크기는 비슷한데

업체는 241개에서 46곳이 됐다.

연계대출 잔액

아직 갚지 않은 대출의 합계다.

그때까지 나간 돈을 모두 더한

누적 취급액과는 다르다.

<표 2> 법이 생기기 전 두 해 반 동안 연체율이 세 배가 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직전까지의 업체 수와 대출 규모 (2017년말~2020년 6월 3일)

구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 3월말	20년 6월 3일
업체 수(개)	183	205	237	240	241
누적 대출액(억원)	16,820	47,660	86,506	95,984	103,251
대출 잔액(억원)	7,532	16,439	23,825	23,819	23,292

구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 3월말	20년 6월 3일
연체율(%)	5.5	10.9	11.4	15.8	16.6

주: 대출 잔액과 연체율은 통계업체 공시 기준 141개사 값이며, 사고로 협회를 탈퇴했거나 모집을 멈춘 업체를 포함한다고 원문이 밝힌다.⁵

자료: 금융위원회, 「온투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P2P 투자자 보호 제도」, 2020년 6월 4일 배포 자료의 표를 그대로 옮김.

등록제로 바뀐 뒤

2022년 1월 12일까지 38개사, 5월 11일까지 47개사가 등록을 마쳤다.⁸

2023년 9월말 등록 업체는 52개사다. 이용자는 약 10만명, 연계대출 잔액은 1조 1,000억원이라고 법률방송뉴스와 이투데이가 적었다. 이용자 1인당 1,100만원꼴이다.^{9,7}

다만 이용자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합친 말이라 한 사람이 넣은 돈이 아니다.⁹

같은 보도는 차입자의 성격도 적었다.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열에 여덟 넘게 옛 신용등급 4등급 아래다. 대출금리는 평균 연 10~15%다. 부동산 담보 상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⁹

2026년 들어 업체 수는 46곳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1월말과 6월말이 같다.¹⁰

금융위원회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세 차례 등록취소를 공고했다.¹¹

돈은 다시 늘어 2조원을 넘었다

연계대출 잔액은 2025년 6월말 1조 2,340억원이었다.¹² 한 해 뒤인 2026년 6월말에는 2조 3,027억원으로 86.6%, 1조 687억원 늘었다.^{12,7} 2020년 6월 3일 잔액은 2조 3,292억원이다. 시장 크기는 비슷해졌고 업체 수는 5분의 1이 됐다.^{6,12}

<표 3> 늘어난 돈의 열에 아홉은 개인신용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이다

연계대출 잔액과 상품 갈래별 잔액 (2025년 6월말~2026년 7월말)

기준 시점	전체 잔액	부동산 담보	개인신용	주식담보
2025년 6월말	1조 2,340억원	—	422억원	—
2025년 12월말	1조 6,072억원	6,589억원	1,373억원	5,237억원
2026년 1월말	1조 7,401억원	6,718억원	1,686억원	—
2026년 6월말	2조 3,027억원	—	4,357억원	8,983억원

기준 시점	전체 잔액	부동산 담보	개인신용	주식담보
2026년 7월말	2조 1,886억원	—	—	—

주: 빈칸은 확인하지 못한 값이다. 주식담보 열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센 스탭론 값이다. 통합공시는 이 상품을 기타담보대출로 묶어 세므로 값이 더 크다. 그 값은 2025년 12월말 6,205억원, 2026년 7월말 7,915억원이다.^{13,12,14}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15일 발표, 국회의원실 자료와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통합공시를 인용한 보도를 정리.

개인신용대출은 2025년 6월말 422억원에서 2026년 6월말 4,357억원으로 10.3배가 됐다. 비중은 3%에서 19%가 됐다.¹² 개인신용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이 1년 동안 늘린 금액은 9,924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92.9%다.^{12,7}

부동산을 담보로 잡던 자리는 줄었다. 부동산 담보의 비중은 2022년 5월 71%였다. 2025년 5월 49.3%, 2026년 5월 31.2%다.¹⁵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넣으려는 상품이 어느 갈래인지 먼저 가른다. 부동산 담보, 개인신용, 주식담보는 위험이 다르다.

확인하는 곳 · 상품 상세 화면의 담보 종류와 차입자 정보 항목

- 2 그 회사의 대출 잔액과 누적 취급액을 구분해 읽는다.

확인하는 곳 · 각 회사 누리집 공시 화면. 누적 취급액은 갠 돈까지 더한 값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잔액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회사가 안전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3장

규칙은 시장이 커진 뒤에 왔다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는 무엇이고, 규칙은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5,237 억원 주식을 담보로 잡는 연계대출 잔액 2025년말 ·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15일 발표	8,983 억원 같은 잔액. 반년 사이 3,745억원이 늘었다 2026년 6월말 · 같은 발표	71.5% 그 반년 동안의 증가율 2026년 상반기 · 같은 발표
---	---	---

수수료는 대출이 나갈 때 생기고 손실은 나중에 온다

회사의 수입은 둘이다. 투자자에게서 받는 플랫폼 이용료와 차입자에게서 받는 주선 수수료다. 이 수수료는 원래 받을 수 없던 돈인데 금융위원회가 2024년 1월 24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¹⁶ 두 수입 모두 대출이 나갈 때 생긴다. 회수되지 않아도 이미 받은 수수료는 회사에 남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었다.¹⁷

회사가 자기 돈을 함께 넣는 길은 열려 있다. 다만 연체율이 10%를 넘으면 새로 하지 못한다.¹⁸

공고로 확인되는 조치 한 건이 이것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준수사항을 어긴 회사에 2025년 3월 19일 영업 일부정지 3월을 내렸다.¹⁹ 2026년 1월 28일에는 저축은행 20개사와 상호금융조합 10곳이 이 투자에 참여할 길을 지정받았다.²⁰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투자한도 확대다. 한도가 오르면 들어오는 돈이 늘고 수수료 기반도 커진다.²¹

규칙은 뒤따라가고, 뒤따라간 사이에 갈래가 바뀌었다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규제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먼저 걸렸다. 이 업권에 걸린 날은 2026년 4월 2일이고, 조치 형식은 행정지도다.²²

금융위원회는 그 발표에서 대출 수요가 이 업권으로 옮겨 오는 것을 미리 막겠다고 적었다.²² 프라임경제와 더팩트는 개인신용대출이 1년 새 10.3배 늘어난 것을 은행권 규제와 이어 붙여 적었다. 이 보고서는 둘 사이의 인과를 단정하지 않는다.²³

주식담보대출은 더 빨랐다. 2026년 7월 15일 알리고 다음 날 시행했다. 알린 쪽은 금융위원회, 규칙을 정한 쪽은 금융감독원이고 근거는 행정지도다.¹⁴

내용은 둘이다. 매월 새로 내주는 주식담보대출을 직전 달 신규 연계대출 취급액의 30% 안으로 관리한다. 그 직전 달 취급액에서 주식담보대출은 뺀다. 또 한 차입자에게 나가는 주식담보대출 한도를 10억원 안으로 관리한다.¹⁴

매월말 잔액을 6월말 수준 안으로 관리하면 앞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¹⁴

전체 잔액은 6월말 2조 3,027억원에서 7월말 2조 1,886억원이 됐다. 행정지도가 시행된 달이다.^{13,12}

규칙이 시장을 좁힌 곳도 있다. 저축은행 한 곳은 한 연계대출 상품 모집 금액의 40%를 넘게 넣지 못한다. 한 상품을 저축은행 돈으로만 채우려면 최소 세 곳이 있어야 한다.^{24,3}

회사는 대출이 나가야 수수료를 번다. 회수되지 않아도 이미 받은 수수료는 남는다. 손실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회사가 자기 돈을 그 상품에 함께 넣는 것이다.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법이 생기기 전에도 같은 일이 났다. 그 무렵 두 사건이 드러났다. 하나는 새로 들어온 투자자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갚던 업체다. 보도에 따르면 돌려주지 못한 투자금이 251억원이다.²⁵

다른 하나는 사실과 다른 동산 담보평가서를 낸 업체다. 검찰이 2020년 7월 15일 이 사건을 알렸다. 자산운용사 여섯 곳과 개인투자자 156명이 모두 554억원을 냈다고 보도가 적었다.²⁵

법이 생긴 뒤에도 연체율은 올랐다. 2023년말에 연체율 15%를 넘긴 업체가 11곳이라고 보도가 적었다.²⁶

영국은 대출형 플랫폼 규칙을 고쳐 2019년 12월 9일부터 적용했다. 영업을 접을 때를 대비한 계획 요건을 강화했고, 조언을 받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이해도 평가를 하게 했다.²⁷

투자자 쪽 한도도 다르다. 열두 달 동안 투자 가능 자산의 10%를 넘게 넣지 않겠다고 확인한 소매투자자만 직접 청약 광고를 받는다.²⁷

<표 4> 지금 이 업권에 걸려 있는 규칙은 여덟 갈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에 적용되는 규제와 그 근거 (2026년 8월 기준)

무엇을 정하나	지금 값	언제부터
등록	등록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020년 8월 27일
자기자본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5억원·10억원·30억원	2020년 8월 27일
한 차입자 한도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와 70억원 가운데 작은 값	2020년 8월 27일
투자금 분리	은행·증권금융회사·자산 1조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에 맡김	2020년 8월 27일
광고	원금 보장·확정 수익으로 오인할 광고 금지	2020년 8월 27일
연체율 단계	10% 초과·15% 초과·20% 초과마다 다른 조치	2020년 8월 27일 (감독규정)
주택담보 규제	규제지역 40%·그 밖의 지역 70%와 집값 구간별 한도	2026년 4월 2일 (행정지도)
주식담보대출	신규 취급 30% 이내, 한 차입자당 10억원 이내	2026년 7월 16일 (행정지도)

주: 아래 두 항목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지도이고, 주식담보대출은 금융감독원이 정했다. 연체율 단계는 감독규정 조문이다.^{14,18,22}

자료: 금융위원회 2020년 3월 30일·6월 4일·8월 26일, 2026년 4월 1일·7월 15일 발표와 법률 원문을 정리.

주식담보대출을 조인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다. 알린 다음 날
시행됐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상품 화면에서 회사가 자기 돈을 함께 넣었는지 본다.
확인하는 곳 · 상품 상세 화면의 자기계산 연계투자 표시
- 2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내건 광고를 본 회사는 거른다.
확인하는 곳 · 광고 문구 자체, 법이 금지한 표현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를 이유는 없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상품마다 담보가 다르다.

4장

얼마나 떼이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

연체율은 무엇을 재는 값이고, 회사가 사라지면 내 돈은 어디에 남는가.

10%

넘으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새로
투자하지 못하는 연체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15%

넘으면 공시해야 하는 연체율
같은 규정

20%

넘으면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하는 연체율
같은 규정

연체율은 금액으로 재는 값이다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은 연체율을 총 연체채권 잔액을 총 연계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한다. 금액 기준이지 건수 기준이 아니다.²⁸ 손실률은 다르다. 그해 회사가 취급한 대출 원금 가운데 끝내 손실이 난 금액의 비율이다. 한 회사 안내 글이 그렇게 적는다.²⁹

갈래마다 값이 크게 갈린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말 업권 전체 연체율은 8.4%로 2022년말의 1.8배다. 주택담보대출은 10.2%, 비주택담보 32.8%,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20.1%다.^{26,7}

비주택담보대출은 취급액의 7%인데 연체율은 32.8%다. 빌려준 돈의 3분의 1 가까이가 늦었다.^{26,7}

아직 대출로 나가지 않은 돈은
먼저 돌려받는다. 이미 나간 돈은
회수되는 만큼만 돌아온다.

연체율과 손실률

연체율은 남은 대출 금액
가운데 늦어진 몫이다.
손실률은 그해 취급한 원금
가운데 손실이 확정된 몫이다.

어음과 매출채권을 낀 상품도 법은 연계대출에 넣는다. 그 갈래만 센 잔액과 연체율은 확인하지 못했다.¹

<표 5> 담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연체율이 세 배까지 갈린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 갈래별 연체율과 취급액 비중 (2022년말~2023년말)

구분	2022년말	2023년말	취급액 비중
업권 전체	4.7	8.4	—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4.5	10.2	54
비주택담보대출	10.7	32.8	7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2.0	20.1	3.5

주: 단위는 %다. 2차 자료라서 표지와 요약, 숫자 상자에는 넣지 않았다. 2022년말 값 가운데 업권 전체 4.7%만 보도가 적은 상승 폭 3.7%포인트를 뺀 것이고 나머지는 보도 그대로다. 취급액 비중은 갈래별 취급액을 전체 1조 1,013억원으로 나눈 값이다.^{26,7}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를 전한 서울경제·매일일보·글로벌이코노믹 2024년 5월 15일 보도를 정리. 2022년말 값과 취급액 비중은 일부 수정.

회사마다 편차가 크다

2024년 8월 대출 잔액 상위 네 회사의 공시를 모은 보도의 평균은 12.97%다.

빌려준 돈 100만원 가운데 약 13만원이 늦어졌다는 뜻이다.^{30,7}

네 회사 가운데 낮은 쪽은 4.81%, 높은 쪽은 32.59%로 6.8배 차이다. 한 해 전 같은 네 회사의 평균은 11.9%였다. 회사끼리의 차이가 평균의 변화보다 크다.^{30,7} 저축은행이 함께 들어간 개인신용대출은 값이 낮다. 2026년 7월 3일 기준 누적 취급액 5,022억원에 연체율 0.75%라는 협회 집계가 있다. 다만 그 상품에 국한한 값이라 업권 전체로 옮겨 읽을 수 없다.³¹

문을 닫으면 돈은 어디에 남나

절차는 다섯 걸음이다. 첫째, 아직 대출로 나가지 않고 예치기관에 맡겨 둔 투자금이 있다. 회사 약관은 등록취소나 파산이 나도 이 돈을 투자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조치한다고 적는다.³² 둘째, 이미 대출로 나간 돈은 연계대출채권으로 남는다. 이 채권은 회사 것이다.

셋째, 회사는 등록취소나 파산에 대비해 청산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원리금 배분과 채권 관리 계획을 법무법인 등에 맡기라고 약관이 정한다.³² 넷째, 회수되는 돈을 원리금수취권 비율대로 나눠 받는다. 회수되지 않은 몫은 받지 못한다.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한 회사 안내 글도 그렇게 적는다.²⁹

법원은 회사의 재량을 넓게 보았다

원리금수취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다툰 사건이 있다. 한 투자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자와 지연이자를 물었다.³³ 1심은 2020년 9월 17일 그 청구를 받아들였고, 2심은 2021년 11월 26일 기각했다. 2심은 회사가 이자를 면제한 행위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³³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넣기 전에 그 회사의 연체율과 손실률, 그리고 그 값의 기준일을 함께 읽는다.**
확인하는 곳 · 각 회사 누리집 공시 화면. 기준일이 없는 값은 견줄 수 없다
- 2 **연체율이 15%를 넘은 회사는 경영공시 대상이다. 그 공시가 올라와 있는지 본다.**
확인하는 곳 · 같은 공시 화면의 경영공시 항목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연체율 0%라는 표시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대출을 최근에 크게 늘렸으면 값을 날이 안 온 채권이 많다.

5장

아직 막히지 않은 곳

지금 규칙이 닿지 않는 자리는 어디인가.

3,000 만원 일반 개인투자자의 전체 투자한도. 2021년 5월 1일부터 걸렸다 금융위원회 2020년 8월 26일 발표	3 건 등록취소를 알린 금융위원회 공고 수 2024년 3월 26일·2025년 4월 2일 ·2025년 12월 23일	3 월 공고로 확인되는 영업 일부정지 기간. 이 조치는 한 건이다 2025년 3월 19일 조치 · 금융위원회
---	---	--

한도는 조였다 풀렸다 했다

2020년 1월 예고안은 일반 개인투자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잡았다.³ 실제로 걸린 값은 낮았다. 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27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는 업체마다 따로 켜다. 한 업체에 1,000만원, 부동산 관련은 500만원이다. 2021년 5월 1일부터는 전체를 합산했다. 3,000만원, 부동산 관련 1,000만원, 한 차입자 500만원이다.²

한국은 투자한도를 금액으로
정한다. 영국은 투자 가능 자산의
10%라는 비율로 정한다.

2023년에는 감독규정을 고쳐 전체 한도를 4,000만원, 부동산 관련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한도는 1,000만원 그대로다. 시행일은 2023년 6월 7일이다.³⁴

2024년에는 한 차입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렸다. 아무 상품에나 걸리는 것이 아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고, 그 돈을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써야 한다. 이 개정은 2024년 7월 23일 국무회의를 지났고 시행령은 7월 30일 개정됐다.³⁵

<표 6> 업체마다 세던 한도를 전체 합산으로 바꾸고 금액을 두 번 올렸다

개인 투자자 투자한도의 변천 (맨 아래가 2026년 8월 기준)

시점	일반 전체	한 차입자	소득적격투자자
2020년 1월 예고안	5,000만원	500만원	전체 1억원 / 한 차입자 2,000만원
2020년 8월 27일~2021년 4월 30일	업체당 1,000만원	500만원	업체당 4,000만원 / 한 차입자 2,000만원
2021년 5월 1일부터	3,000만원	500만원	전체 1억원 / 한 차입자 2,000만원
2023년 6월 7일부터	4,000만원	500만원	전체 1억원 / 한 차입자 2,000만원

주: 시행령은 총 한도를 일반 5,000만원, 소득적격 1억원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도록 정한다. 표의 값은 그 고시 금액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은 1,000만원 그대로다. 개인전문투자자에게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2,3,34,35}

자료: 법제처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0년 8월 26일 발표, 감독규정 개정 고시, 시행령 원문을 정리.

광고에는 금지 목록이 붙어 있다

법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으로 오인할 광고를 금지한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광고, 사실을 감추는 광고도 막는다. 다른 회사를 헐뜯는 광고도 막는다.³⁶

미리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방문·전화·전자우편으로 광고할 수 없다. 투자 상품 광고에는 회사 이름과 상품 내용, 투자 위험을 넣어야 한다.³⁶ 손실을 메워 주는 것도 막는다. 미리 약속하든 나중에 메워 주든 금지이고, 통상 수준을 넘는 편익도 금지다.⁴

규칙이 아직 닿지 않은 자리

첫째, 이 업권을 조인 최근 두 규칙은 모두 행정지도다. 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하는지가 법에 없다. 둘째, 그것을 언제 규정으로 옮길지 밝힌 대목은 두 발표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셋째, 투자한도를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은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넓게 열려 있다. 넷째, 갈래로 나눈 업권

연체율은 2023년말 뒤의 값이 없다. 이용자 수도 2023년 9월말 뒤의 값을 확인하지 못했다. 투자자와 차입자를 나눈 값, 어음과 매출채권을 낀 상품의 갈래별 값도 없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내 소득이 소득적격투자자 기준에 드는지 센다. 한도가 달라진다.

확인하는 곳 · 근로·사업소득 합계가 1억원을 넘는지,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지 본다

2 한 차입자에게 넣는 금액이 500만원 안인지 계산한다.

확인하는 곳 · 투자 화면의 한도 안내. 회사가 달라도 전체 한도는 합쳐서 센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한도를 다 채워야 할 이유는 없다. 한도는 상한이지 원하는 금액이 아니다.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화면과 숫자,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14%

등록 업체를 거쳐 받는 이자소득에서 떼는 세율

소득세법 · 2026년 1월 1일 시행분

25%

등록 업체를 거치지 않고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서 떼는 세율

같은 조문

500만원

한 차입자에게 넣을 수 있는 일반 개인투자자 한도

금융위원회 2020년 8월 26일 발표

돈을 넣기 전에 할 것

1 그 회사가 등록 업체 목록에 있는지 조회한다.

확인하는 곳 ·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업권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고른다

2 그 회사 공시 화면에서 연체율·손실률과 기준일을 읽는다.

확인하는 곳 · 각 회사 누리집 공시 메뉴. 연체율 15%를 넘으면 경영공시 대상이다

3 넣을 금액이 한도 안인지 센다.

확인하는 곳 · 전체 4,000만원, 한 차입자 5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1억원과 2,000만원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내건 광고를 본 회사는 더 볼 이유가 없다. 법이 금지한 광고다.

국민이 할 일

앞 상자의 셋에 세금 계산을 더한다. 등록 업체를 거쳐 받는 이자는 14%를 떼고 준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5.4%다. 등록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받는 이자는 25%다. 이자 100만원이면 소득세만으로 14만원과 25만원이 갈린다.^{37,7}

금융회사가 할 일

공시 화면부터 고친다. 첫째, 연체율과 손실을 옆에 산출 기준일을 함께 적는다. 기준일이 없으면 회사끼리 견줄 수 없다. 둘째, 연체율이 금액을 재는 값이지 건수를 재는 값이 아니라는 것을 같은 화면에 적는다. 셋째, 영업을 끝낼 때 채권 관리를 누가 이어받는지 약관이 아니라 투자 화면에서 알린다. 넷째, 자기 돈을 함께 넣은 상품인지 표시한다.^{32,28}

당국이 할 일

규칙의 형식과 자료의 주기를 함께 손봐야 한다. 첫째, 행정지도로 조인 두 사항을 언제 규정으로 옮길지 시점을 밝힌다. 둘째, 업권 전체 연체율을 갈래별로 정해진 주기에 공개한다. 셋째, 이용자 수를 투자자와 차입자로 나눠 공개한다. 넷째, 어음과 매출채권을 낀 상품을 갈래로 나눠 함께 싣는다. 다섯째, 제재와 등록취소 내역을 업권별로 모아 공개한다.^{9,14,19,26}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세 가지가 남아 있다. 하나는 주식담보대출 행정지도의 결과다. 매월말 잔액이 2026년 6월말 8,983억원 아래에 머무는지 보면 된다. 둘은 개인신용대출이 어디까지 늘어나느냐다. 1년 만에 10.3배가 된 흐름이 이어지는지 보면 된다. 셋은 기관 자금의 몫이다. 셋 다 통합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12,14,20}

연구소는 이 시장에서 투자자가 지는 위험이 상품의 수익률보다 구조에서 온다고 본다. 투자자가 갖는 것은 대출채권이 아니라 나눠 받을 권리이고, 회수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APPENDIX A

부록 가·용어 풀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온라인 화면에서 투자자의 돈을 특정 차입자에게 빌려주는 영업이다. 그 대출에서 나오는 원리금을 받을 권리는 투자자에게 준다. 흔히 P2P금융이라고 부른다.

원리금수취권

회사가 회수한 상환금을 투자 금액에 비례해 받기로 한 권리다. 대출채권이 아니다.

예치기관

투자금과 상환금을 회사 돈과 섞이지 않게 따로 맡아 두는 곳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회사가 자기 돈을 그 상품에 함께 넣는 것이다.

소득적격투자자

한 해 근로·사업소득 합계가 1억원을 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이다. 투자한도가 일반 개인투자자보다 높다.

주식담보대출

가진 주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스탁론이라고도 부른다.

APPENDIX B

부록 나·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모두 2026년 8월 30일에 열어 확인했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문 원문. elaw.klri.re.kr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70247)
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024년 7월 30일 개정분. law.go.kr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250591>)
3.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better.fsc.go.kr
(https://better.fsc.go.kr/fsc_new/replyCase/LawreqDetail.do?stNo=11&muNo=171&muGpNo=75&lawreqIdx=3705)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고시 제2020-37호·제2023-26호·제2024-28호. law.go.kr (<https://www.law.go.kr/LSW//admRulSl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43184>), 조문 본문은 ulex.co.kr
(<https://www.ulex.co.kr/%EB%B2%95%EB%A5%A0/2100000192348-73641-%EC%98%A8%EB%9D%BC%EC%9D%B8%ED%88%AC%EC%9E%90>)
5. 「소득세법」 제129조. 2026년 1월 1일 시행. law.go.kr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21176&lsId=001565&print=print>)

6. 금융감독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안」 본문·별표·별지. fss.or.kr
([https://www.fss.or.kr/fss.hpdownload?file=/USR/%EC%98%A8%EB%9D%BC%EC%9D%B8%ED%88%AC%EC%9E%90%EC%97%B0%EA%B3%84%EA%B8%88%EC%9C%B5%EC%97%85%20%EA%B0%90%EB%8F%85%EA%B7%9C%EC%A0%95%20%EC%8B%9C%ED%96%89%EC%84%B8%EC%B9%99%20%EC%A0%9C%EC%A0%95%EC%95%88\(%EB%B3%B8%EB%AC%B8%EB%B3%84%ED%91%9C%EB%B3%84%EC%A7%80\).hwp&type=lmx](https://www.fss.or.kr/fss.hpdownload?file=/USR/%EC%98%A8%EB%9D%BC%EC%9D%B8%ED%88%AC%EC%9E%90%EC%97%B0%EA%B3%84%EA%B8%88%EC%9C%B5%EC%97%85%20%EA%B0%90%EB%8F%85%EA%B7%9C%EC%A0%95%20%EC%8B%9C%ED%96%89%EC%84%B8%EC%B9%99%20%EC%A0%9C%EC%A0%95%EC%95%88(%EB%B3%B8%EB%AC%B8%EB%B3%84%ED%91%9C%EB%B3%84%EC%A7%80).hwp&type=lmx))
7. 금융위원회, 「온투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P2P 투자자 보호 제도」, 2020년 6월 4일. fsc.go.kr (<https://www.fsc.go.kr/po010101/74361>)
8.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2020년 8월 26일. 정책브리핑 전재본. korea.kr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899>)
9.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 2020년 3월 30일. fsc.go.kr (<https://www.fsc.go.kr/no010101/74235>)
10. 법제처 입법예고, 시행령 제정안 공고 제2020-22호. moleg.go.kr (<https://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Cd=0&lawSeq=57511&lawType=TYPE5&mid=a10104010000>)
11. 금융위원회,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2022년 1월 12일·5월 11일. 77222 (<https://www.fsc.go.kr/no010101/77222>), 77778 (<https://www.fsc.go.kr/no010101/77778>)
12. 금융위원회, 온투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방안, 2024년 1월 24일. fsc.go.kr (<https://www.fsc.go.kr/no010101/81543>)
13.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3년 6월 7일. fsc.go.kr (<https://www.fsc.go.kr/po040200/80135>)
14. 금융위원회, 「개인투자자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2024년 7월 23일. fsc.go.kr (<https://www.fsc.go.kr/no010101/82718>)
15. 금융위원회, 「온투업권 스탭론 리스크 관리 강화」, 2026년 7월 15일. fsc.go.kr (<https://www.fsc.go.kr/no010101/87327>)
16. 금융위원회,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년 4월 1일. fsc.go.kr (<https://www.fsc.go.kr/po010101/86606>)
1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4건 지정 의결, 2026년 1월 28일. fsc.go.kr (<https://www.fsc.go.kr/no010101/86157>)
1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48호(조치내용 공고, 2025년 3월 24일). fsc.go.kr (<https://www.fsc.go.kr/po040200/84225>)
19. 금융위원회 등록취소 공고 — 제2024-84호, 제2025-162호, 제2025-1031호. 81958 (<https://www.fsc.go.kr/po040200/81958>), 84278 (<https://www.fsc.go.kr/po040200/84278>), 85921 (<https://www.fsc.go.kr/po040200/85921>)
20.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화면. fine.fss.or.kr (<https://fine.fss.or.kr/fine/fncoco/systemFncCo/list.do?menuNo=900038>)
21. 데일리펀딩 온라인연계투자약관 제9조·제14조. daily-funding.com (https://www.daily-funding.com/bbs/content.php?co_id=provision_investment)
22.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온투업 투자 안내 글. blog.pfct.co.kr (https://blog.pfct.co.kr/investment_guide2_cple/)

23.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PS19/14, 2019년 12월 9일 적용. fca.org.uk
(<https://www.fca.org.uk/publication/policy/ps19-14.pdf>)
24. 법률사무소 인평, 원리금수취권의 효력과 채권관리업무의 범위, 2022년 6월 29일.
inpyeonglaw.com (<https://inpyeonglaw.com/archives/18645/>)
25. 업권 규모와 잔액 보도 · 법률방송뉴스·이투데이(2024.1~2), 한국경제(2026.2.2), 연합뉴스·SEN TV·파이낸셜투데이(2026.6.8), 매일경제·프라임경제·뉴스1·핀포인트뉴스·더팩트(2026.7), 아시아타임·포인트데일리(2026.8)
26. 연체율 보도 · 서울경제·매일일보·글로벌이코노믹(2024.5.15),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SM데일리(2024.9)
27. 한도와 상품 보도 · 헤럴드경제(2026.3.26), 비즈워치(2022.8.29), FETV(2025.5.20), 전자신문(2026.8.3), 프라임경제·헤럴드경제·뉴스1(2026.7.14)
28. 사고 업체 보도 · 연합뉴스·서울신문·세계일보(2020.7.15), 뉴스1·이데일리·시사저널(2020.8)

각주

1. 온투법 제2조 정의, 제6조 임원 자격, 제7조 변경등록, 제9조 신의성실의무. 연계대출에 어음할인과 양도담보를 넣는다는 대목도 제2조에 있다.
2. 금융위원회 2020년 8월 26일 발표. 시행령, 미등록 영업 벌칙, 예치기관, 투자한도가 있다. 총 투자한도는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 제2020-22호에 자기자본 세 단계와 예고안 투자한도가 있다. 금융기관의 연계투자 한도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다. 부동산 담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상품은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나머지는 100분의 40이다.
4. 금융위원회 2020년 6월 4일 발표. 한 차입자 대출한도, 손실보전 금지, 과도한 편익 금지가 원문에 있다.
5. 같은 발표의 표 아래 각주. 잔액과 연체율은 통계업체 공시 기준 141개사 값이고, 사고로 협회를 나갔거나 모집을 멈춘 업체를 포함한다.
6. 같은 발표의 표. 2017년말부터 2020년 6월 3일까지의 업체 수와 대출 규모가 있다.
7.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1.1조 ÷ 10만명 = 1,100만원. 103,251 ÷ 16,820 = 6.1배. 16.6 ÷ 5.5 = 3.0배. 23,027 - 12,340 = 10,687억원. 9,924 ÷ 10,687 = 92.9%. 8.4 ÷ 4.7 = 1.8배. 8.4 - 3.7 = 4.7%. 5,944 ÷ 11,013 = 54%. 772 ÷ 11,013 = 7%. 390 ÷ 11,013 = 3.5%. 32.59 ÷ 4.81 = 6.8배. 100만원 × 0.1297 = 13만원. 14% + 1.4% = 15.4%.
8. 금융위원회 2022년 1월 12일과 5월 11일 발표. 누적 등록 38개사와 47개사가 원문에 있다.
9. 법률방송뉴스 2024년 2월 2일과 이투데이 1월 24일 보도. 금융위원회 발표를 전한 값이며 누리집 본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신용등급과 금리는 개인신용대출에 한정된 값이라고 두 보도가 밝힌다.
10. 한국경제 2026년 2월 2일과 의원실 자료를 전한 2026년 7월 보도. 1월말과 6월말 모두 46곳이다.
11. 금융위원회 공고 화면. 제목에 이 업권 이름이 든 공고 가운데 등록취소는 제2024-84호, 제2025-162호, 제2025-1031호 세 건이다.
12. 이양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중앙기록관리기관 자료로 산출한 값. 여섯 매체 이상이 잔액과 증가율을 같게 실었고, 9,924억원은 네 매체·1조 2,340억원은 뉴스1에서 봤다.

13. 통합공시를 인용한 보도. 2025년 12월말과 2026년 1월말 갈래별 값은 한국경제, 7월말 값과 기타담보대출은 세매체 보도에서 확인했다.
14.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15일 발표. 잔액 두 값, 증가액 3,745억원과 71.5%, 7월 16일 시행, 신규 취급 기준의 모수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뺀다는 대목이 원문에 있다. 형식은 행정지도다.
15. 연합뉴스 2026년 6월 7일과 SEN TV·파이낸셜투데이 보도.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해마다 실려 있다.
16. 금융위원회 2024년 1월 24일 발표. 차입자에게서 주선 수수료를 받게 허용하겠다는 대목이 있다.
17. 금융위원회 2022년 1월 12일·5월 11일 발표의 이용자 유의사항. 차입자가 갚지 못하면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고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18. 감독규정 제10조 제1항의 연체율은 100분의 10, 제8조 제1항의 공시 기준은 100분의 15, 제12조 제1항은 100분의 20이다. 조치 내용은 금융위원회 2020년 3월 30일 예고 자료에 있다.
1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48호. 조치일 2025년 3월 19일, 영업 일부정지 3월, 자기계산 연계투자 준수사항 위반이 적혀 있다.
20. 금융위원회 2026년 1월 28일 의결. 지정 34건 가운데 30건이 이 업권 연계투자 서비스이고, 신청한 곳은 저축은행 20개사와 조합 10곳이다.
21. FETV 2025년 5월 20일과 전자신문 2026년 8월 3일 보도. 투자한도 확대 요구가 실려 있다.
22. 금융위원회 2026년 4월 1일 발표. 집값 대비 대출 비율 규제와 구간별 한도, 4월 2일 시행, 조치 형식이 행정지도라는 것이 원문 표에 있다. 대출 수요가 이 업권으로 옮겨 오는 것을 막겠다는 대목도 있다.
23. 프라임경제 2026년 7월 14일과 더팩트 7월 15일 보도. 개인신용대출 증가를 은행권 대출 규제와 이어 붙여 적었다. 이 보고서는 둘 사이의 인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24. 헤럴드경제 2026년 3월 26일과 비즈워치 2022년 8월 29일 보도. 시행령 제정안 예고 자료에도 같은 비율이 있다.
25. 연합뉴스·서울신문·세계일보 2020년 7월 15일 보도. 검찰 발표를 전한 값이다. 돌려막기 사건과 251억원은 뉴스1·이데일리·시사저널 2020년 8월 보도에 있다.
26. 서울경제·매일일보·글로벌이코노믹 2024년 5월 15일 보도. 금융감독원이 국회의원실에 낸 자료를 전한 값이며, 2차 자료라서 표지와 요약에는 넣지 않았다.
27.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PS19/14. 열두 달 동안 투자 가능 순자산의 10%를 넘게 넘지 않겠다는 확인 요건과 이해도 평가, 영업 종료 대비 계획 강화가 원문에 있다.
28. 금융감독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안. 연체율을 총 연체채권잔액 ÷ 총 연계대출잔액 × 100으로 산정한다고 적혀 있다. 확정된 시행세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과 금융감독원 법규 화면에서 찾지 못했다.
29. 한 온투업자가 낸 투자 안내 글. 연체율과 손실률의 뜻, 예금자보호법 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회사 설명이며 감독규정 원문이 아니다.
30.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SM데일리 2024년 9월 보도. 상위 네 회사의 공시를 모은 값이며 회사별 값과 2023년 8월 평균도 있다.
31. 프라임경제·헤럴드경제·뉴스1 2026년 7월 14일 보도. 협회 집계이며 저축은행이 함께 들어간 개인신용대출에 국한한 값이다.
32. 데일리펀딩 온라인연계투자약관 제9조 제3항·제14조 제1항. 회사 약관이며 감독규정이 아니다.
33. 법률사무소 인평의 정리에 따른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583이다. 판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34.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6호. 한도 4,000만원, 부동산 2,000만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1,000만원 유지가 원문에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발령일과 시행일을 모두 2023년 6월 7일로 적었다. 이투데이가 적은 그해 5월 적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35. 시행령 제27조 제6항·제7항. 총 한도는 소득적격 1억원, 그 밖은 5,000만원 안에서 고시한 금액이다. 한 차입자 한도는 2,000만원과 500만원이고, 요건을 갖춘 사회기반시설사업 차입자에게는 4,000만원과 3,000만원이다. 제7항은 개인전문투자자를 뺀다. 2024년 7월 30일 개정분이고 금융위원회 2024년 7월 23일 발표와 함께 봤다.

36. 온투법 제19조. 광고 금지 행위, 사전 동의·거부 의사 규정, 광고에 넣을 항목이 원문에 있다.

37.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이고,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거쳐 받는 이자소득은 100분의 14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제목	투자자가 갖는 것은 대출채권이 아니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72 · NEXUS Research 2026_72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8월 31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30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투자자가 갖는 것은 대출채권이 아니다」, 넥서스 리서치 2026_72, 2026.
수정 이력	없음
누리집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투자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